

# KOTRA 신남방 지식재산권 정보

'21.3.8-19

KOTRA 해외지재권실은 신남방 5개국(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) IP-DESK와 함께 수집한 지식재산권 이슈를 보내드립니다.

- \* 각 뉴스의 제목을 클릭하시면, 해당 원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.
- \* 문의처 : KOTRA 해외지재권실 (02-3460-3354, ip-desk@kotra.or.kr)

## 1 지식재산권 소식

### 베트남

#### ○ 베트남 대표 농산물, 지리적 표시(GI) 보호로 일본 진출

商標権者の氏名又は名称	ホイヤン スアット ティチュウ ヴァイ ティユルックカン
登録商標	
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	第29類 ライチの乾果及び塩漬、乾燥加工したライチ 第31類 ライチ
商標登録の登録番号	第5623485号

- 북동부 박 장 省의 대표적 농산물, '뤽 응안 리치 열매'(베트남 GI 보호 등록, '08년 No.00015)가 등록 신청('16.6)\*후 4년여 만에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베트남 최초로 일본 내 지리적표시 보호권 획득,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('21.3.12)
- \* 부온 마 투 옷(Buon Ma Thuot) 커피, 빈 투안(Bihn Thuan) 용과, 뉘응안 리치(Luc Ngan Lychee) 리치
- 지식재산청, 일본 당국의 심사 대응을 통해, 열매의 특성, 지리적 특징 및 재배과정 등에 대한 실험 및 검증 기준 개정, 문서관리 등, GI 보호 품목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

#### ○ 지식재산청, 해충방제 관련 유전자원(Genetic Resources) 특허 소개

- 해충예방 및 구제의 독성 화학물질 최소화 및 천적 활용 기반의 생물적 친환경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로, '곤충병원성 선충(EPN, Entomopathogenic Nematode)\*의 현장외(ex-situ) 보존방법'에 발명특허 부여('20.12, 제 26872 호) ('21.3.10)
- \* 해충을 감염시켜(곤충병원성-昆蟲病原性) 박멸시킨 후 시체 위에서 증식하는 가느다란 선충(線蟲)
- 주요내용
  - '생태 및 생물 자원 연구소'의 '응 유엔 응옥 차' 교수 연구팀 수행
  - 베트남 산림유전자원에서 증식속도가 우수한 10종 12개의 토착 EPN 균주 추출, 실험실 보존 대비 고효율의 ex-situ(현장 외, 중남부 미린 생물다양성 기지) 보존 방법 발명
  - 해충 천적의 다양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친환경 해충 방제 프리바이오틱스의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기대

## ■ 태국

### ○ 지식재산청, '초고속' 상표권 갱신등록 서비스 제공

- 상표권 권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, '21.3.1 이후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건에 대해 기본 요건 충족 시\* 추가 관납료 없이 신속심사 적용, 전자신청 후 45분 내로 갱신등록증 발급 ('21.3.5)

\* 지정상품 및 서비스 개수 30개 미만, 등록 세부사항에 변경 없을 것, 권리자 또는 대리인(권리자 대신 갱신등록증 수령 요)이 'Fast-track 심사' 직접 신청

### ○ 지식재산청, '20년 및 '21.1월 위조품 단속 통계 발표

- 태국 왕립경찰청(The Royal Thai Police)에 따르면 위조품 유형은 대부분 상표 도용과 저작권 불법복제물 유통임('21.3.18)
- 위반 단속건수 및 압수품목 수는, 상표권 1,270건/323,032개('20년), 125건/496,797개('21.1), 저작권 527건/35,469개('20년), 60건/756개('21.1)으로, 특히 '21.1월 상표권 단속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함

관할기관	'20년		'21.1월		'20.1월대비 증감	
	단속 건수	압수 품목수	단속 건수	압수 품목수	단속 건수	압수 품목수
<b>태국왕립경찰청</b>						
상표권	1,270	323,032	125	496,797	18.11%	1,745.50%
저작권	527	35,469	60	756	36.62%	(74.55%)
특허권	0	0	0	0	0%	0%
계	1,797	358,681	185	497,553		

## ■ 필리핀

### ○ 지식재산청, '혁신 및 기술지원센터(ITSO)'의 '20년 성과 평가

- '20년 우수 ITSO\* 시상('21.3.12)

\* 지식재산청이 '10년 이후 84개 대학 및 연구소에 설치한 지역지식센터로서, 발명가의 특허 출원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'18년 이후 한 해 평균 2,000여건의 특허 등 출원해 내국인 전체 출원의 50%를 차지

· Platinum 증서 (6개 이상의 특허출원과 1개 이상의 사업화 도움)와 Gold 증서(6개 이상의 특허출원)를 총 7개 대학 센터에게 수여

- '20년 한 해 동안 IISO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전년대비 76%, 62%가 각각 감소된 것 관련, 성과측정 및 평가 틀 이용 등 운영의 디지털화를 높이는 등의 개선책 논의

○ 지식재산청, 일본과 신기술 발명 심사역량 강화 협력

- 일본특허청과 신기술 공동 워크숍 개최하여, 인공지능, 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, 진보성 요건 심사기준 공유 및 현안 논의
- 특허협력조약(PCT)의 23번째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('19.5.20)\* 위상에 걸맞게, 특허국(BOP, Bureau of Patent)주관으로 디지털 신기술 관련 심사역량 훈련프로그램 지속 개발 추진('21.3.10)

\* 한국 특허청은 '99.12.1부터 10번째 국제조사기관 및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중임

○ 통상산업부, 온라인 위조·불법복제품 퇴치 시스템 강화

- '20년 한 해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위조상품 및 불법복제품 신고건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 및 지식재산권 행정단속 법령 개정 시행
- 주요내용

- 신남방 국가 중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,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사업자(Lazada, Shopee) 및 글로벌 브랜드 소유기업들(유니레버,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등)과 협력('21.3.2)

- 1) 온라인 위조품 퇴치를 위한 브뤼셀 양해각서('16년)를 모델로 함
- 2) 전자상거래플랫폼 실무강령 채택 및 간편한 신고와 신속한 게시중단 절차 마련
- 3) 전자상거래플랫폼 중간매개체(ISP, 전자결제대행사 등)의 책임강화 법안 추진

- 지식재산권 행정 단속 개정 규정 (Revised rules of procedures on admin enforcement IP Rights) 시행 발표('21.3.4)

- 1) 지식재산청 지재권집행국(IEO)에 '온라인, 디지털 경로' 포함 위조·불법복제품의 모든 제조, 판매, 수출입 등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명령권 부여
- 2) 침해자의 행정명령 이행기간을 대폭 축소(60일→ 72시간)
- 3)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직권(Motu proprio) 모니터링 실시 및 권리자에게 침해예상 통지

## ■ 인도네시아

### ○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국, 디지털 영역의 저작권 보호 강화 추진

- 창작자, 음반제작자, 공연자, 라이선스관리단체들과, 음악저작물의 기계적권리(Mechanical Rights, 복제·배포권)와 음반저작물(녹음물)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 (스트리밍) 공연권 보호 강화, 라이선스관리업체(LMKN)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선진화 등을 위한 정부 법령(RPP, Rancangan Peraturan Pemerintah) 초안에 대해 논의('21.3.8)
-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협회와 전통무용 영상제작자들과도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지식재산청 내 '수사분쟁조정국'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조사 역할 강조('21.3.15)

### ○ 특허 및 영업비밀국, '2021년 특허의 해' 이벤트 추진

- '21년 특허권 우선순위 프로그램 운영안에 따라, 특허출원의 내국인 비중을 10%(연 평균 1,300~1,800 건)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, 대학 및 특허개발연구원, 산업종사자들 대상 특허출원서 작성 지원, 특허분쟁 중재 서비스제공 등의 지역 특허창출 지원 이벤트 킥 오프('21.3.18)

## ■ 인도

### ○ 통상산업부, 스타트업 지원정책 성과 발표

- '스타트업 인도(Start-up India)' 프로그램, '16.1.16 ~'21.2월 기간 동안 총 44,534개의 스타트업을 지원, 특허출원 5,253건(등록건수 514건,'21.3.10현재), 상표출원 12,264 건('20.11월 현재)의 성과 도출('21.3.18)
- 주요 지식재산권 지원정책
  - 출원수수료 감면(특허 80%, 상표권 50%) 및 특허 출원시 신속심사 진행
  - 총 천여명의 특허·상표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의 무료 자문 서비스

### ○ 대법원, 코로나 관련 기한 연장 조치 마무리

- 법원 업무의 코로나 이전 일부 회복을 위해, '제출기한 및 소멸시효(공소시효)의 연장 조치('20.3월)'에 대한 종료 기준 발표('21.3.8)
- 상표권 관련 내용
  - 의견제출통지 답변 제출, 이의신청 제기, 이의제기 반대의견 제출 등의 기한 ('20.3.15~'21.3.14 → '21.6.14 으로 일괄 연장)

- 상표권 갱신·회복 신청 기한( '21.3.14 + 20.3.15현재 잔여기한'으로 개별 연장)
- 상표침해 등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(형사소송 공소시효) :  
'20.3.15~'21.3.14 기간 제외하여 침해발생일로부터 3년 계산하여 산정  
예) '19.3.15 침해발생 시 '22.3.15 → '23.3.15 로 소멸(공소)시효 연장

○ **텔리 고법, 해외유명상표의 상표 희석에 대한 신속한 금지 결정 내림**

- 유명 자동차 제조사 볼보가, 인도 상표청으로부터 해외저명상표로 등록된 자사의 상표 'volvo' 를 훔피 도메인명 회사 이메일 아이디, 온라인 상호명등으로 도용([www.vaishalivolvo.com](http://www.vaishalivolvo.com), vaishalivolvo35@gmail.com)한 것과 관련, 인도 여행사 Vaishali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, 사칭통용 및 등록 '상표희석(Trademark dilution)' 소송에서, 법원은 원고의 회복불가능한 손해 등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해 신속한 금지가처분 결정 내림('21.2)

○ **텔리 고법, 음반저작물(녹음물) 공연권 제한 예외 판결 내림**

- 인도 음악저작물라이선스관리단체(IPRS, 원고)가 인도의 라디오 방송 사업자(Entertainment Network, 피고)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(공연권) 침해 소송에서, 법원은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음반저작물(녹음물) 공연권을 제한하는 규정(1957년 제정 저작권법 19조)에도 불구하고, 피고가 방송 중 혹은 이벤트에서 녹음물을 아티스트를 통해 라이브 실연하는 경우에는 녹음물저작권관리단체(PPL)로부터 사용권 확보한 것 이외에 IPRS에 별도로 라이선스를 구하라고 판결('21.2)

이번 호에서는, 우리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이 베트남 현지 파트너, 바이어 등 제3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,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

\* 문의처 : KOTRA 호치민 무역관 IP-DESK (seaegghr@kotra.or.kr)

\* 문의처 : KOTRA 해외지재권실 (02-3460-3354, [ip-desk@kotra.or.kr](mailto:ip-desk@kotra.or.kr))

## □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

###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(제재) 방안

- 베트남에서는 행정단속을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신속한 절차로 소규모 침해의 즉각적 중지 및 경고, 벌금, 압수, 영업정지 및 국외방출, 폐기명령 등이 가능
  - 행정제재 관할기관
    - 산업통상부 시장관리국(MMB)과 공공안전부 경제경찰(EP)(소규모, 단순유형 침해, 2~4주)
    - 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국(산업지식재산권, 영업비밀, 저작권 침해사건)
  - 행정제재 절차
    - (권리자)침해증거와 베트남지식재산권연구소(VIPRI)의 침해판정서를 첨부 신고
    - (관할당국)자체조사 및 권리자와의 협업 등을 통해 최종 행정처분\*
- \* 벌금규모 : 개인 2.5억 VND(한화 약 12백만원), 법인 및 단체 5억 VND(한화 약 24백만원)

### ② 직권에 의한 행정단속(Ex-officio Administrative Action)

- 다수의 침해신고에 의한 행정단속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경우, 관할당국은 권리자 신고 없이 직권으로 침해의심 업체에 대한 급습, 조사 및 단속 진행
- (권리자)침해품 진품여부 확인 이외에 별도의 추가비용 및 행정부담이 없음
- 지난 몇 년 간 신고에 의한(complaint-based) 행정단속 건수는 줄어든 반면, 직권(Ex-officio)조사에 의한 행정단속은 증가추세임

